

시민 10명 중 7명 “자치경찰 몰라요”

광주·전남 ‘자치경찰제’ 시행 1년 <상> 달라진 게 없다

지방분권과 경찰권 분산이라는 취지 아래 도입된 자치경찰제도가 7월 1일 시행 1년을 맞이한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맞춤형 자치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치안 현장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 중인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는 시민 반응이 다수를 이룬다. 일선 경찰 역시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시행 1년이 된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분석한다. <편집자 주>

광주, 어린이 안전·도시철도 공사구간 불편 최소화 교통대책
전남, 노인·섬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정책 성과로 꼽지만
제복 그대로...이중 보고에 이행 속도 느려 시민 체감도 낮아

◇광주·전남도 자치경찰제 1년 성과는=30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 사무 관련 경찰권을 부여하고, 주민 의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치안정책을 펼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됐다.

자치경찰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크게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응급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교통범죄 등 수사 사무다.

시행 1년 주요 성과로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수립·시행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시민 불편 최소화 ▲주민주도 치안서비스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 인구 비율이 총인구 대비 11.3%로 7개 특광역시 중 2위라는 점에 주목, 1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스쿨존 사·중점 노면색 표시, 스쿨존 보호구역 범위 조정, 스쿨존 법규 위반 중점 단속에 주력했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과 후 약 1년을 비교하면 스쿨존 교통사고는 시행 전 14건(사망 1명, 부상 15명)이었는데, 시행 후 1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8명이 부상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광주시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관련 광주시 조례 제정 등 토대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같은 기간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인구와 섬에 방점을 두고 치안 정책을 펼쳤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4.6%에 이르는 지역 특성과 도내 유인도서가 271곳이나 되지만, 경찰력이 배치된 곳은 59곳에 그친다는 점을 주목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스쿨존과 유사)을 확대하고, 2만1653명에 이르는 목격노인 세대를 전수조사해 지구대·파출소와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범죄 예방 효과가 큰 선착장 CCTV 설치 사업도 경찰권이 상주하지 않는 섬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드론을 통한 섬지역 범죄 예방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시민 10명 중 7명 “자치경찰 몰라요”=제도 시행 1년을 맞이했지만,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단적인 예가 자치경찰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지역 주민 대다수가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 8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광주 자치경찰 인식도 및 정책 수요 여론조사’에서 확인된다. 당시 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7명(70.3%)은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자치경찰제의 의미나 역할은 물론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시민이 절대 다수라는 의미다.

경찰 내부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걸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선 경찰관들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전처럼 교통 지도와 단속을 하고, 여성·청소년 범죄 예방 등 업무를 하는 것은 그대로”라며 “되래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보고를 두 군데로 하는 문제가 있거나 자치경찰위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등 일부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김태봉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는 “시행 초기인 데다 국가 경찰 조직이 유지된 채로 자치경찰 사무만 이양돼 시민들 체감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시민을 상대로는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민들 목소리를 듣고 올 봄부터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현장 밀착형 치안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자치경찰제 시행 덕분”이라며 “교통 분야 등이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되지 않고 국가경찰 사무로 남겨졌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기형적으로 설계돼 자치경찰위 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제도 개선 전까지 시민들 목소리를 토대로 위원회가 필수 있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시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3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광주경찰청 교통순찰대 송창주 경장이 퇴근 시간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교통 지도를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아 올봄부터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을 중심으로 출퇴근 혼잡 시간 교통 지도에 나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

“미쓰비시에 정당한 배상 받게 한국 정부는 제발 나서지 마라”

한·일 정부 ‘대위변제’ 논의에 강제징용 피해자 탄식

“아흔이 넘는 나이에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사죄받고 싶은 마음 뿐. 지금어서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우리나라가 그거밖에 안대요?”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는 대신,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쏟아낸 탄식이다.

양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광주시의 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전범기업으로부터 사죄와 함께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진짜 주범은 동원 주체였던 일본 정부”라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 소송에까지 개입해 판결 이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적반하장을 보인다”고 했다.

또 지난 4월 방일한 한일정책협의단(단장 정진석 국회의원)이 일본 측과 만나 소위 ‘대위변제(채무자가 아닌 제3자 등이 갚는 행위)’ 방안

에 대해 논의한 것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 “해법을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대위변제’, ‘300억’ 기금 조성, ‘피고 기업 불참’ 등의 얘기가 피해자 측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대위변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의무 없는 자가 모금이나 출연을 통해 거둔 돈으로 피해자에게 기부하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왜 가해자에게 기부를 받아야 하나”라고 따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1차관이 주재하고 전문가, 피해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출범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당 기업의 국내 특허권 등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매각 명령을 받아냈지만 해당 기업들은 명령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도심하천에 무슨 일?

북구 서방천 물고기 집단 폐사 도로변 오염물질 유입된 듯

광주시 북구 임동 가아첸피어스필드 주변 서방천에서 물고기가 대량 폐사해 자치구가 원인파악에 나섰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서방천 일대(신안교-유운교)에서 다량의 물고기가 폐사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광주시, 북구, 광주환경공단,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이 서방천 일대에서 폐사한 300여마리의 물고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서방천 인근에서 폐사한 물고기는 서구 유촌교 인근까지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 관계자는 인근에 폐수를 배출할 공장이 없고 폐유 등 기름이 유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동안 가뭄으로 인해 도로변에 쌓였던 미세 먼지 등 오염물질이 지난 밤 내린 비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된 것을 폐사의 원인으로 꼽았다.

비가 적게 내리면서 산소가 풍부해지기 보다 도로에 쌓여있던 물질들이 하천에 유입되면서 용존산소량(DO)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북구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무작위로 세 곳의 하천물을 채취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실제 북구가 인근 물을 측정해본 결과 물고기 생육에 필요한 용존산소량(5ppm)에 한참 미치지 못한 1.3ppm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